

## 기초단체장 선거 맞나...권한 넘는 '대선급 공약' 남발

### 6·3 지방선거 D-69

정부부처 이전·동구·화순 행정통합

북구·담양 광역생활권 재편 공약도

실행방안 없이 장밋빛 청사진 제시

실행성·진정성 의문...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 광주 5개 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정부부처 이전, 자치구·시·군 행정통합, 광역생활권 재편 등 기초자치단체장 권한 범위를 넘어선 '대선급 공약'을 남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4·5면

지역 밀착형 정책 경쟁보다 상징성이 큰 초대형 공약을 앞다퉛 내놓으면서도 정작 실행 방안은 담보돼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5개 구청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 당시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의 통상적 권한을

벗어난 대형 공약이 잇따라 제시됐다.

동구청장 경선에 나선 A후보는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간 것처럼 동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와야 반드시 동구가 살아날 수 있다"며 핵심 공약으로 문체부 광주 동구 유치를 내걸었다.

B후보도 "동구·화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며 "동구의 문화·상권과 화순의 의료 바이오 산업을 결합하면 병원·연구소·기업이 함께 들어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보냈으면 문체부를 반드시 광주로 보내야 맞다. 광주로 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동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청장 경선에서도 광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이 선행돼야 할 공약이 등장했다.

C후보는 "광주의 AI와 첨단 의료, 담양의 농생명, 푸드테크, 문화·관광을 잇는다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북구와 담양을 공동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단독 결정하거나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부처 지방 이전은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추가 지방 이전은 없다고 단호한 입

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개척 등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다. 추가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시·군 간 행정통합이나 광역생활권 재편 역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협의 방식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2면에 계속 /변은진 기자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발족...행정통합 속도

통합과제·제도 개선 등 공식 협의·대응

시·도 소통 창구...쟁점 해결 기능 수행

'전남·광주 행정통합 정책협의체'가 발족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통합 실무 작업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2면

2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 권한 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인 정책협의체가 전남 발족, 첫 회의를 가졌다.

〈사진〉 정책협의체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 현안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필요하다는 양 시·도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시·도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통합 과제에 대한 공식 협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책 마련과 관련 특별법 등 제도 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족과 동시에 나주 소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안, 주요 통합 과제 및 공동 추진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 운영은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하되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시·공간의 제

약 없이 격식 없는 논의를 거쳐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양 시·도는 조직·인사·재정·법제·전산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통합과 특별법 후속 조치, 중장기 발전계획, 공인·공부 정비 등을 포함한 핵심 통합 과제를 우선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 절차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광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책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도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출범까지 90여일 남은 만큼 주요 통합 과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실무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로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주요 통합 과제 외에도 전 분야에 걸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통합 성과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중량제 봉투도 대란 우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나프타(남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25일 본초동 소재 중량제 봉투 보관 창고에서 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 중동전쟁 대응...靑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물가·에너지수급 등 5개 실무반

청와대는 25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중동 정세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구체적인 상황실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강 실장이 비상경제상황실장으

로 조직을 이끌게 됐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기로 했다. 또 홍 수석이 총괄간사 역할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한다.

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에너지 수급반, 금융 안정반, 민생 복지반, 해외 상황 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 수석은 "중동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 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전쟁

여파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민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기호 2면 강기정 ▶5면

Today	
2월 한 달 2천여명 광주·전남 떠났다	12면
남도인물열전-선박 기술자 '나대용'	14면
'검종 끝'...필승카드 선택만남았다	16면

# 가족 제26회 사랑 건강걷기대회

2026. 4. 4(토) 오전 8시 30분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참여하는 '제26회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를 오는 4월 4일(토) 개최합니다. 봄기운을 느끼면서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야외음악당에서 개최식을 갖고 광주전변 일원을 걷습니다. 건강걷기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족과 단체·동호회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2026년 4월 4일(토) 오전 8시 30분 ~ 낮 12시

**집결장소**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또는 모바일 접수

**접수마감**  
2026년 4월 2일(목) 오후 5시

**참가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참가비**  
무료

걷기대회  
모바일접수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광역시육상연맹
후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협찬 광주은행 GS칼텍스 BS보성